

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9. 12. 26(목) 총 3매(본문3)
담당부서	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석기, 사무관 좌명환, 박승연, 김병채 • ☎ (044) 201-4504, 4506, 4740, 3360
	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	담 당 자	• 과장 최종희, 사무관 김예슬 • ☎ (044) 202-3070, 3073
보 도 일 시		2019년 12월 27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27.(금) 06:00 이후 보도 가능	

쪽방·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자활을 지원하겠습니다.

국토부, 복지부, 지자체 손잡고 비주택 거주자 주거일자리 지원

- 이주지원: 보증금·이사비·생필품 지원, 임대주택 내 생활가전 설치
- 정착지원: 이주 후 자활일자리 제공·지자체 연계 사례관리 제공

- 앞으로는 쪽방·노후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가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·이사비가 지원되고 이주 후에는 자활일자리와 돌봄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주거복지 및 자활지원 관계기관,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자활 지원이 본격 시작된다고 밝혔다.
-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「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*」에 따른 것이다.
 - * 다자녀·비주택 등 핵심지원 대상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등 우선지원('20~'22)
- 먼저, 국토부는 주거복지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시 부담이 되는 보증금·이사비·생필품 등을 지원하고, 이주하는 임대주택에는 냉장고·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을 설치(빌트인)한다.

- 복지부는 자활복지개발원과 협력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후에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자활일자리와 자활 사례관리를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제공한다.
 - 지자체는 읍·면·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활동과 연계하여 커뮤니티 케어, 가사·간병·건강 지원 등 맞춤형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이와 관련하여 27일(금) 오후2시 서울 도봉구 방학2동 주민센터에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(MOU) 2건이 체결되었다.

<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정착지원을 위한 MOU 체결 >

- ① 주거복지재단·서민주택금융재단·LH·감정원·HUG·주택관리공단 :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해 각 기관의 사회공헌 사업을 연계하여 보증금·이사비·생필품* 등 이주비용을 지원
 - * 보증금은 본인 부담이 없도록 하고, 이사비 및 생필품 각각 20만원 한도 지원
- ② LH-자활복지개발원 : 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와 자활·사례관리 서비스 신청 절차를 원스톱 연계하고, 지역자활센터에서 커피숍·베이커리·집수리 등 다양한 일자리를 맞춤 안내

- 한편, 국토교통부는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조속한 주거지원을 위해 12월 9일부터 전국 기초지자체와 현장 방문팀을 구성하여 쪽방·노후 고시원 거주자 등의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전수조사 중이다.
- 발굴된 이주희망자는 LH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를 통해 1:1 주거지원 상담을 받고 주택물색 및 서류절차 등 이주절차 전반을 지원받아 신속하고 간편하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으며,
 - 이 과정에서 이번에 체결된 협약 등에 따라 보증금·이사비·생필품 지원 및 자활일자리 등을 제공받게 된다.

-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은 “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의 임대주택 공급에 더하여, 공공기관 사회공헌 사업과의 연계, 복지부, 지자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이주와 일자리 등 통합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”면서,
 - “쪽방·노후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이번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상향과 삶의 질 개선을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- 보건복지부 장재혁 복지정책관은 “이번 협약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한 분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-일자리 연계모델이 구축되었다”면서,
 - “특히, 지역자활센터가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기관으로 적극 참여하여 연계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김병채 사무관(☎ 044-201-3360),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김예슬 사무관(☎ 044-202-307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